

민주 해남·진도 補選 공모 13명 신청

이정일 전의원 부인 정영희씨·김봉호씨 등 외부인사 영입위해 9일까지 기한 연장

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이정일 전 의원의 부인인 정영희씨를 비롯, 김봉호 전 국회의장 등 총 13명(비공개 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공특위(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도 신안군수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 후보군 압축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8일 최종 후보 선정 방법을 결정한다.

4일 민주당 해남·진도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결과 총 10명의 예비 후보자가 공개로, 3명의 예비 후보자가 비공개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정일 전 의원의 부인인 정영희(57)씨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6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봉호(73) 전 국회의장도 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김홍길(36) 변호사와 김다섭(45) 변호사도 참신성과 전문성을 무기로 공천을 신청했다.

또한 장진형(45) 전 민주당 대변인, 양동주(63) 북태평양문제연구소장, 민상금(61) 전 한국토지공사 감사, 민병록(52) 효산건설 대표, 김필용(45) 전 민주당 기초위원장, 이석재(60) 전 전남도의원도 도전장을 던졌다.

민주당은 외부인사 영입 등을 위해 공모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 예비

후보자는 20명 선에 육박, 한 장의 공천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비공개로 신청한 일부 예비 후보들의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정일 전 의원 측근은 “정영희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남 지구당 당직자들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진의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3차 공특위를 열고 신안군수 예비후보자 13명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 후보군을 한자리 수로 압축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공특위를 개최, 최종 후보자 결정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공특위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당선 가능성, 경력, 학력, 당 기여도, 전문성, 도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미FTA 저지 곡성군민대회 갖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곡성군 농민회 회원 등 200여명이 4일 곡성군청 앞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곡성군민대회'를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추징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검토”

김성호 법무 “全·盧 전 대통령 재산환수 전담반 확대”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자력 집행권과 사설 조회권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국세청이 국세 미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체납액

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인 자력 집행권을 검찰에도 부여하고, 미납자가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노역장에 가둬서라도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13명인 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인원을 필요하다면 늘리겠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한편 김 장관은 사형성 게임 버리 의혹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선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영등위 심의와 상품권 발행권 관련된 정치권, 관료의 로비 연루 의혹을 먼저 밝히겠다. 업체의 불법 행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모든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증여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이건희 회장 부자 소환 조사나 사법처리 여부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이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계제헌법 도입과 관련, “경제적 약자인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평준화 비판론자 교육수장 맡겨도 되나”

교육위 일부 與의원 “김교육 내정자 교육철학 우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당 의원 대다수가 김 부총리 카드를 고심 끝에 나온 무난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도 별다른 비토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교육원칙을 강조하는 우리당 일부 교육위원들이 문 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4일 “김 부총리 인선에 대한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이라며 “교육부총리 인선이 오래 걸릴수록 혹시 이상한 인물이 내정돼서 또 한 바탕 소동이 벌어지지 않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야 모두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은 김 내정자의 행정경험 부재, 수월성(秀越性 : 우수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 교육을 강조하고 평준화에 부정적인 교육정책 철학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치 야당의원처럼 철저한 검증에 다짐하고 나섰다.

정봉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김 내정자가 행정경험이 없어서 이해관계 충돌이 많은 교육부에서 험난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김 내정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여당 교육위 위원들과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내정자가 대학에 (임시,등록금 등) 무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행정경험 부재, 청와대가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오�히려 김 내정자가 평준화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고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핵심관계자는 “김 교육부총리 내정은 인사 문제로 더 이상 고심을 빚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고심 끝에 여야가 수용할 만한 인물을 선정할 것인데 여당의원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 의원의 라디오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정책기조와 내 생각 일치”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사진)는 4일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방향에서 일치한다”며 “그래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교육철학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상반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없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교육정책은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며 “개별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청문회 등을 통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엄 기획홍보관리관은 “공교육정상화, 교육의 질 향상, 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의 분야에서 내정자의 생각과 현 정부 교육정책이 맥을 같이 한다”면서 “평준화정책은 보완돼야 하지만 기본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남뉴스

“비전 2030 논의 안하면 직무유기”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사진)은 4일 “오는 2020년 총선거가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빈하게 닥친 현실에서 ‘비전2030’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김병희·지승현의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현 단계에서는 재정조달에 집중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제도를 어떻게 바

꿀지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민적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재정이 바닥나서 국민의 부담이 장기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을 하면 국민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노대통령과 동지지만 사적 친분은 없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4일 자신의 헌재소장 지명을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 “코드인사 논란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우려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6~7일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깊지만 사적인 친분은 없다”며 “헌재소장은 누가 추천했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35년 전통의 복교당 한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득홍 오가미 식용

장생식품 TEL: 062-385-3303, 362-6900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한미약품 본산복합비타민

TEL: 062-223-5544, FAX: 062-223-5542

7월 공무원

40년 전통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부경철직

40년 전통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중개사

40년 전통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전남고시학원

40년 전통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인테리어

40년 전통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